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 더 강화해야 한다

특별기고



한춘옥

전남도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된 참깨에서 무려 국내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농약 성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준이 1kg당 0.05mg인데 반해 미국산에서는 0.934mg이 검출된 것이다.

현행 체계 위험물질 검출 한계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정밀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1건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20건에 달하는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지만 '글리포세이트'를 전혀 검출해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식약처가 고시한 정밀검사 128종, 무작위 표본검사 514종의 잔류농약검사 대상에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는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허술한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포함된 참깨를 아무런 의심없이 소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2A군) 물질'로 분류한 성분이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미국의 기준치는 1kg당 40mg로 우리 기준치의 800배에 달하며, 수확 전 작물의 건조를 위해 살포하는 농업 관행으로 인해 고농도로 잔류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미FTA 발효 15년차를 맞는 내년에는 참깨의 관세가 철폐되며 미국산 참깨 수입량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 20%를 밀뭍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의 대부분을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작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산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것이 도드라지기는 했지만, 이미 국내에 수입되는 수많은 농산물에는 제초제, 살균제, 저장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현행 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실제 유입되는 위험 물질을 검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매일 소비하는 먹거리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늘 사후약방문격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대처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국민들의 몫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항목을 전면 재정비하고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단순한 표본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확대되고, 검사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유통과정에서도 해당 농산물이 어디서 수입됐고 어떤 검사 기준을 통과했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관리시스템 등도 보다 세밀하게 개편해야 한다.

피해는 국민 몫...전면 재점검

전남도 또한 도내에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자체적인 표본검사와 안전성 확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한 식탁을 위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의 위성 및 식물검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잔류농약의 허용범위와 기준값의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검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강대국의 통상 압박에 정책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되 식량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넘겨줘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와 식탁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고



김근중

보성군산림조합장

민주언론 환경, 사이버 기자가 망친다

감사드리는 바이다.

진정한 언론인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쟁취한 민주언론, 자유언론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립된 민주언론에 편승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개인 인터넷 매체가 공익 차원에서 묵묵히 일하는 언론까지 비난받게 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확인되지도 않는 기사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허락도 받지 않고 타사 기사를 마음껏 베껴 마시 본인인 현장을 직접 취재하거나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기사를 보도하여 관계 기관에 보내 은근히 위력을 과시 하는가 하면 같은 내용의 기사를 00군 00시 등으로 지역 이름만 바꿔 수년째 같은 내용을 '되풀이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것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특정 개인 인터넷 매체가 지적한 것처럼 일선 산림조합은 카르텔을 형성할만한 권한도 예산도 능력도 없다 그저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일부 산림사업을 수익계약 받아 수익금으로 일선 산림조합에 근무하는 산림경영지도원들이 눈치를 살피며 굶지 않을 만큼 대가를 지급 받고 있다. 그이상의 이익이 발생되면 조합원들에게 출자 배당을 하고 작자가 나는 조합은 직원들의 급여를 조합원들의 출자금에서 감자를 해야 하는데 어찌 카르텔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

는지 묻고 싶다.

공직 회계부서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취득한 법의 맹점을 활용하여 일선 지자체 계약담당자들을 찾아다니며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 '비(非)보도'를 무기로 관련 본인과 관련된 관의 산림업체에 대해 수익계약(사익)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속보건, 3보건 지속적으로 보도하다 목적이 달성되면 슬그머니 기사를 내린다는 사실은 언론인으로 부끄럽고 독자들에게 창피하지 않은가?

공무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만큼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일선 산림조합을 찾아다니며 약자들에게 '뺨이나 뺨' 것은 사이버 언론의 전횡이다. 그것도 모자라 작당한 개인 인터넷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집단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사이버 언론은 사익을 위해 언론이라는 흉기를 들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백주대낮에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조폭과 다르지 않다.

온 국민의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탄생된 민주언론에 편승하여 이 사회의 선구자인 양 감히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괴변으로 카르텔을 청산해달라고 읊소를 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언론을 무기로 서슴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횡포를 부리는 사이버 언론들의 적반하장(賊反荷杖)적 행태에 대해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사회악을 척결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CCTV 열람 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려야 하고, 이때 "경찰 입회 필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CCTV 열람을 요구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치명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감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 준수를 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폭우 피해 정부 전폭적 지원 절실

지난 7월 쏟아진 집중호우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극한 폭우가 광주 전남을 덮쳤다. 1시간 동안 최고 142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불과 보름 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광주 북구 일대는 다시 물에 잠겼고, 무안과 함평·담양 등 전남 지역 주택과 상가, 농경지도 속대밭이 됐다. 보름 전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땀 흘리던 주민들은 만연자실, 하늘만 원망하는 지경이다.

시간당 14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무안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읍내 저지대, 근정 1층 등이 침수됐으며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숨졌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린 함평군은 읍내와 5일 시장 주변이 침수됐고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 지역들은 보름 전에 발생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규모와 비교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폭우 때도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인 상

황에서 이번 폭우는 주민들의 삶에 치명타가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

현재 풍수해 보험 제도가 70~90%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해 영세 서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더 급하기 때문이다.

극한 폭우에 따른 풍수해 피해 최소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풍수해 피해 보험에 미가입된 영세 서민들과 상인들에게 수재의연금을 우선지원 하는 등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 의무화와 보험료 등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에 맞는 지원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풍수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상품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아울러 극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지방하천 주요 구간의 설계기준 강화와 해안 침수 방어대책을 세우는 등 선제적 예방책 마련도 중요하다.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원망할 수 없다. 촘촘한 예방 대책과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교통 약자 위한 광주 스마트 카 사업 '눈길'

광주시가 고령 운전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스마트 카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 카 개발 사업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활용해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AI 기반 맞춤형 교통안전 및 편의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사업이다. 상용화에 성공하면 고령자 등 교통 약자 운전자들의 인지적 한계와 상황 대응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행 안정성과 운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교통 약자의 운전 중 위험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년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사업(스마트 카) 공모에 최종 선정돼 받은 국비 70억 원과 민자 31억9,000만 원 등 모두 101억9,000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교통 약자 주행 패턴 분석을 위한 내·외부 인지 센서 융합 및 모듈 개발, 맞춤형 음성·사용자 경험(UX) 적용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운전자 도움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평가 검증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GGM의 캐스퍼 차량을 활용한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자동차 제조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판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지, 제어, 통신 등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의 자율 주행 핵심부품 인증 평가 및 실증 사업과 연계될 경우 광주시가 미래차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미래차 산업 선도를 위해 지난 2023년 진국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까지 약 220만 평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받아 2028년까지 총 657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기반 구축, 연구 개발,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다. 광주시가 시비 부담 없이 국비와 민자를 유치해 교통 약자를 위한 스마트 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완벽하고 신속하게 성공시키고 미래차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약자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바란다.

사진 속 세상



먹이 받아먹는 하얀 제비

5일 제주 서귀포시 대표동의 한 전깃줄 위에서 흰 제비 새끼가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있다. 흰 제비는 색소 부족이나 결핍으로 생기는 알비노 현상의 돌연변이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최근 아파트 주차장 및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문콕 및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는 같은 아파트 거주자라고 생각해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경찰관 없이는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엄격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183건(54%)이다.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해야 한다.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유를